



Dignity for Soldiers, 군인에게 존엄을!

TEL | 02-733-7119 FAX | 02-2677-8119

E-MAIL | mhrk119@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mhrk.org

주소 | (04057)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201호

제 목 : 한위수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국방부 군 인권 자문 위원회」 위원장 위촉 비판 긴급 논평
일 시 : 2019. 03. 26
담 당 : 기획정책팀장 김형남

[긴급 논평]

양승태 적폐 인사 '인권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국방부

□ 금일(2019. 3. 26.) 국방부는 「제3기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구성, 한위수 前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 한위수 씨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양승태 前 대법원장에 의해 2012, 2015년 2회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인사다. 법관으로서 재직하던 중의 판결, 연구 등이 인권 옹호와 관련이 없었고,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때에는 도리어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된 'PD수첩 광우병 방송'관련 소송에서 정부 측의 변호를 맡거나, '인터넷 실명제 및 댓글 삭제'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으로 판결 난 인터넷 실명제를 옹호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의 변호를 맡는 등 인권 옹호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지명 당시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 한위수 씨는 MB,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인권위가 유명무실해지던 시절, 인권 옹호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가 정권과 지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대표적인 사례다.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로 인권위에 두 차례나 입성한 한 씨는 인권위원 재직 중에도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도리어 반인권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 2014년, 카드 3사에서 1억 4백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 고객의 동의가 없어도 금융지주회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당시 인권위에서 이 사건이 토의되는 과정에서 한위수 씨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한 회사 내에서처럼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면, 사업하는데 방해나 불편만 끼친다. 카드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만들때 고객들에게 동의를 다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의 애로사항도 생각해야 한다."라며 회사 측을 옹호하고 나섰다. 결국 인권위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냈다.

2015~2016년에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누가 떡을 잘치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회식 중에는 여성 직원의 손을 만지고 러브샷을 한 뒤 의사에 반대 포옹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졌으나 한 씨가 위원으로 포함 된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을 각하, 기각시켰다. 성희롱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각하, 성추행은 마땅한 증거가 없으며 기각시켰다. 인권위가 한 일은 고작 회식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뿐이었다.

2017년,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에서 색출이 인권 침해라는 성소수자 군인들의 진정 사건을 '기각'시켰다. 당시 성소수자 군인들은 군형법92조6을 통한 성소수자 색출의 부당함, 자백 강요로 이뤄진 불법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형법 92조6'은 현행법임으로 법 집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시켰고, 불법수사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인권위 결정 전, 군사법원은 자백 강요로 이뤄진 수사는 불법이라며 관련 수사 기록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 씨는 군사법원만도 못한 결정을 내린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었다.

이 모든 것이 양승태의 고집에 따라 인권 옹호자로서의 자각을 갖추지 못한 자격 없는 인권위원이 지명된 결과다.

□ 국방부는 한위수 씨를 위원장을 위촉하며 '20여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는 등 명망이 높으며, 인권 문제 관련 객관적·중립적 입장을 가져 군 인권 자문위원회 운영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군인권자문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의 자문기구다. 객관적인 판단은 정책 결정권자의 몫이지 자문하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다. 인권 문제를 자문하는 위원들에게 객관과 중립을 요하는 것은 국방부가 병영 인권 개선에 큰 관심이 없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부당한 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야 할 인권 옹호자에게서 객관과 중립을 미덕으로 찾는 국방부나, 인권 문제에 있어 별 다른 입장이 없고, 법관 마냥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한 씨나 한심스럽기는 매한가지다.

□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급여도 대폭 인상되었으며, 군인권보호관 설치, 병영인권관 설치, 군사법원 폐지, 영창 폐지가 추진되는 등 국군 장병 인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때에, 인권과 하등 관계없는 양승태 적폐 인사가 국방부 인권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의 장으로 임명된 점이 심히 개탄스럽다.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위원장 위촉을 통해 드러난 인권 문제를 대하는 국방부의 얄은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

2019. 03.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사무국
군인권센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 54-64) 태인빌딩 201호
Tel: 02-733-7119 FAX: 02-2677-8119



군인에게 존엄을! Dignity for Soldiers!